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지난 6월 24일

IMF에서는 세계경제전망치를

4월에 이어 한 번 더 하향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20년 세계경제 성장률 -4.9%('20.4월대비 △1.9%p)로 전망

전 세계적인 봉쇄조치(lock-down) 장기화에 따른

성장 잠재력 저하와

예상보다 더 커진 경기위축 가능성 등

불확실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팬데믹 제어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실물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며

향후 상황악화에 대비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2-1. 민생·금융안정패키지 이행상황]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현재(6.26일 기준) 56.4조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은
6월 29일부터 전국 지방은행*에서도
지원신청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또한 지난 6월 25일 1조원 규모의
코로나19 P-CBO(6,950억원), 주력산업 P-CBO(3,240억원)
발행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였고
6월 발행분부터는 여전채를 편입시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경우
유사시 시장안정판(backstop)으로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금융시장에서 기업의 자체적인 자금조달이나
135조+@ 프로그램을 통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다면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대응여력을 남겨두어야 할 것이며
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구제금융의 역할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추경을 통한 재원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경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실히 설명해나가겠으며
국회에서의 조속한 추경안 논의를 기대합니다.

올초에 각종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할 당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과
은행권, 증권사에 대한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경우
9월까지 한시적 운영을 예정하였습니다.

이들 조치들에 대한
운영기간 만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기한 연장여부 및 정상화방안 등에 대해
금융회사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2-2. 금융회사 건전성과 실물경제 지원의 관계]

한국은행의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이 민생금융안정패키지 시행에 따라
금융시장의 안정세가 유지되고 신용공급이 지속된다면

코로나19 정책대응이 없었던 경우에 비해
금융회사들의 자본적정성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주에 언급한
금융회사들의 건전성과 실물경제의 지원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임을
상기시켜주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보완적 관계는
코로나19 영향 장기화에 따른 대비와
금융회사들의 자본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IMF*와 美 연준(Federal Reserve Board) 에서도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위한
자사주 매입금지 및 배당금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Update 6.25일) Bank capital, liquidity, and macro prudential buffers should be used to absorb losses and manage liquidity strains and to help support lending to the economy. Bank should halt dividend payments and buybacks while the crisis lasts to help support capital buffers.

은행권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참고하여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코로나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손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2-3.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 추진]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늘어난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 부문과 무관한 주택 투기수요 확대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고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6월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였고
후속조치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일(7월1일)부터는

①법인을 활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모든 주택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됩니다.

②또한,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등 실수요 요건이 강화됩니다.

한편, 지난 6월19일 신규 지정된 규제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규제지역이 신규 지정될 때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고,
이번에도 일관성을 유지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대책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과의 점점인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규제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민들이 충실히 안내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금융회사 경영진 차원에서
일선 직원들의 규정 숙지, 원활한 안내 등에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금감원도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지역 현장방문, 문의사항 응대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3. 마무리 말씀]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 美 연준, IMF 보고서들을 종합해보면
전세계가 팬데믹 극복을 위하여

실물경제 지원, 금융회사의 건전성, 금융안정성 간
균형 달성이라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均衡)의 뜻은
저울(衡)의 양팔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均) 모양새 입니다.

정부는 실물경제 지원의 시급성과
중장기적인 시계에서의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아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